

##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이무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1. 머리말

북한 경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성장을 보여왔다. 연구 분야도 총론적 논의로부터 북한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한 연구, 나아가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논의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질적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 중 상당수가 경제현황이나 경제정책 평가라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실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료의 부족이라는 북한 연구의 제약성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자료의 문제는 정치, 사회 영역의 북한 연구보다 북한 경제 연구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 북한 경제와 관련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도 신뢰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 당국의 경제에 관한 공식통계는 196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해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발표 자체가 거의 중단되었다.<sup>1)</sup> 통계자료의 부족은 수리적 분석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학적 방법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통계자료 이외의 다른 경제관련 자료들도 북한의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거의 획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은 이론 및 방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sup>2)</sup>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구나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시장개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체제의 역동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북한 체제의 정체는 북한의 경제개혁 연구에 있어 총론적 분석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미시적 연구를 어렵게 만들어왔다.

북한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말부터 사회

- 
- 1)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관들이 북한 경제와 관련된 기초통계를 추정하고, 통일부가 종합,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통계가 북한 경제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2)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로는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0);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서울: 해남, 2002);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2);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형태의 변화”(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3);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서울: 통일연구원, 2005)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보면 북한 경제 연구에서 연구자의 노력에 따라 자료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권의 몰락과 독일통일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연구는 붕괴론 및 흡수통합론에 입각해 주로 남북한 통합의 당사자 입장에서 북한 경제개혁 가능성 및 체제전환을 전망하고 이를 대비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sup>3)</sup>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개혁, 개방, 체제전환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없이 사용함으로써 경제개혁을 시장화(marketization)와 등치시키거나 체제전환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어느 정도 극복되어 나갔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가시적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과 함께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와 관련해 크게 계획개선이라는 신중한 입장과 시장개혁이라는 적극적 해석을 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북한 경제개혁 연구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 경제개혁 연구에서 총론적 수준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현재 북한 경제개혁 연구에서 총론적 수준의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개혁 여부다. 과연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둘째,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개혁적 요소가 있다면, 그 개혁의 내용과 성격은 무엇인가? 셋째,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 조건과 방식은 무엇인가 등이다.<sup>4)</sup>

3) 북한 체제 붕괴론 및 지속론에 대한 논거와 쟁점에 대해서는 윤미량, “북한 체제의 내구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서울: 한울, 2005), 75~111쪽 참조.

4) 이밖에 경제개혁과 정치사회적 변수와의 관계, 경제개혁과 관련한 남한의 효과적일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의 개혁 및 체제전환과 통일과의 상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도 나름대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해 왔었다. 그런데 북한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정책의 개혁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리되지 않은 채 있다가 이후 북한의 또 다른 정책이 이루어지면 그 논의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정책의 개혁적 측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정책의 과급효과를 과대평가하기도 했었다. 또한 개혁여부나 개혁의 성격을 차지하더라도 경제개혁의 성공조건 및 방식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의도와 맞물려 학술적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다양한 주장 사이의 엄밀한 학술적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의 구체적인 제도 변화 수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자료와 사실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작용한다 하겠다.<sup>5)</sup> 그렇다고 북한의 경제개혁 여부, 내용, 방식 등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 체계에 대한 평가 작업까지 방기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관관계 규명 등도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경제개혁 자체와 관련된 쟁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논외로 한다.

- 5) 북한 체제 변화론을 둘러싼 이념적, 정책적 대립이 상대방의 시각이나 주장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시각을 보다 세련된 형태로 가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학술적 논의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 2.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북한 적용

### 1) 개혁과 체제전환의 구분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개혁 연구도 기본적으로 ‘경제개혁’이 무엇인가라는 개념 규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규정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경제개혁 논의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1990년대 연구들을 보면,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단순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앞서 말했듯이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시장화와 등치시키거나 체제전환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고 있었다.<sup>6)</sup> 이러한 인식은 결국 북한의 경제정책을 분석, 평가하는데 있어 제한적 성격에 주목하게 만들고,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개혁’은 체제를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체제의 개선 또는 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제도 및 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을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이다. 결국 개혁이란 ‘혁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진화론적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선 또는 개조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연구에 있어 자주 인용되는 코르나이(Janos Kornai)의

---

6) 고현욱은 1990년대의 북한 경제개혁 관련 연구들이 경제개혁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동유럽 또는 중국에서와 같이 시장체제로의 전환, 즉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현욱, “북한 경제 연구의 딜레마와 제언: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연구의 성찰』(서울: 한울, 2005), 109쪽.

개념 규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코르나이는 한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reform)’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려면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지배에 의한 권력구조, 국가소유체제, 관료적 조정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서 비교적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체제의 기본적인 속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이 붕괴되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전환은 체제의 다른 영역의 변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형태의 전환을 사회주의 체제전환(post-socialist transi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빈(Marie Lavigne)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소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체제 일부를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8)</sup> 라빈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개혁 작업이 공산당의 통제력 완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국가소유의 독점 완화를 통한 소유제도의 다양화, 시장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정부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라는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소유,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이러한 특성의 변경 및 개선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바로

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2), pp.387~392.

8)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5), pp.29~43.

집권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로, 국가적 소유의 독점 완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의 변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내용은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sup>9)</sup>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 초기에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물질적 자극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추진한다.<sup>10)</sup>

1960년대의 소련 및 발전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은 경제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운영원리의 효율화를 위한 작업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부에게 초기 개혁은 체제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적 조치들은 지도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의 효율성과 중앙집중적 통제 사이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과 지도부 내의 정책 갈등 및 선택 등이 결합하여 다양한 개혁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물론中间的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서구 학자들은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체제, 특히 정치체제에 손상이 가

- 
- 9)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 유무 및 결합 정도, 그리고 그 진행 정도에 따라 개혁의 수준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 10)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소유권 문제나 시장 도입은 분권화보다 사상적 측면에서나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이는 당국가 권력의 주도 아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 내에서 개혁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국내에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목도하면서 학문적 엄밀성을 통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연구하기보다는 기대와 바람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 혹은 체제전환을 전망했었다.<sup>11)</sup> 이러한 개념 및 인식의 혼란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경제개혁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북한 경제개혁 연구에 있어 개혁과 체제전환은 구분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경제현실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개혁을 표방하지도 않고,<sup>12)</sup> 실시하는 대부분의 정책변화들도 비공개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됨에 따라 외부 관찰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sup>13)</sup> 이에 따라 과연 현재 북한의 경제변화의 내용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경제의 변화는 사실상 북한당국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서로 이질적인 정책들의 복합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시스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 시스템 이외의 시

---

11) 김영호,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1995); 전홍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등을 참조.

12)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이전과 달리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 2003년 6월 10일.

13)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39쪽.



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어떤 정책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북한 경제정책의 개혁여부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경제정책의 일부에 집착하여 개혁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정책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개혁 개념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경제개혁은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를 의미한다. 개혁은 기존 경제시스템(계획경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 이외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 경제시스템의 개선 작업이 모두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혁 여부의 기준은 바로 앞서 살펴봤듯이 집권적 의사결정구조에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로, 국가적 소유의 독점 완화 여부, 관료적 조정메커니즘의 변화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개혁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한다면,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개혁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개혁과 전환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은 개혁과 전환 사이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개혁의 여러 단계 혹은 유형과 그 경계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분화된 개념과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들이 과연 체제의 성격변화를 가져왔는가 혹은 가져올 것인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곧 북한 경제체제는 개혁단계에 진입했는가? 그리고 만약 진입했다면 북한 체제가 개혁과 전환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 2) 경제개혁의 성격과 유형: 계획개선 개혁과 시장사회주의 개혁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크게 두 가지 유형(단계)으로 구분하고 있다. 샤방스(Bernard Chavance)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에서 붕괴까지의 전 과정을 고전적 시스템(traditional system) → 시스템 개선(system adjustment) → 급진적 개혁(radical reform) → 시스템의 해체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sup>14)</sup> 고전적 시스템은 ‘복합체 시스템’과 ‘기타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때 복합체 시스템은 제도적 기반(국가 소유, 단일정당)과 중앙계획화(관리의 위계구조, 계획목표의 분배, 투입요소의 행정에 의한 할당, 단일은행)로 이루어진다. 복합체 시스템 이외의 기타 요소는 농업의 집단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 사적 부문의 제한, 전체적인 기업관리 등을 의미한다. 그는 고전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개혁을 시스템 개선과 급진적 개혁의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먼저 시스템 개선은 복합체 시스템의 제도적인 틀을 유지한 채 기업 자율성의 확대, 경제운영의 분권화,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원칙의 완화 등 복합체 시스템 이외의 요인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1950~1960년대의 폴란드, 소련, 동독 등에서 발생했다. 급진적 개혁은 복합체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은 그대로 둔 채 중앙계획화의 수정 또는 복합체 시스템 이외의 요인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 개혁은 1966~1969년의 체코, 1968년의 헝가리의 신경제메커니즘, 덩소핑의 중국을 예로 들고 있으며, 급진적 개혁의 핵심은 계획과 시장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

14) Bernard Chavance,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Boulder: Westview Press, 1994) 참조.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해 고전적 사회주의 → 개혁 사회주의 → 사회주의 체제전환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하면서, 개혁사회주의를 세분화하여 시장화 → 사유화 → 자유화(민주화)로 구분하고 있다.<sup>15)</sup>

시장화 단계는 개혁사회주의의 1단계로서 가격개혁 → 시장사회주의 → 기업의 자주관리로 보고 있으며 이는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이 시장조정 메커니즘으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사유화는 개혁사회주의의 2단계로서 소유제에서의 사적 소유의 인정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하여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사유화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화(민주화)는 개혁사회주의의 3단계로서 체제전환에 도달하기 전단계이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산당 권력독점 및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의 완화,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약화 등의 정치적 자유화 확대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속성인 일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의 소멸을 가져오며 시장친화적 정치권력의 등장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체제의 전환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경제개혁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도 이러한 단계(혹은 유형)에 근거해 사회주의 체제변화를 나누어 현재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김연철은 사방스의 논의를 기반으로 사방스의 시스템 개선과 급진적 개혁을 계획개선과 시장개혁으로 재구성한 후, 북한이 2002년에 취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시장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16)</sup>

---

1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18~30, 565~570.

정형곤은 고전적 사회주의가 개량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를 거쳐 체제전환에 이른다고 보고, 북한의 '7·1 조치'를 개량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로 가기 전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sup>17)</sup> 반면에 박형중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부분개혁과 시장기구 도입형 개혁 2단계로 구분하고, 북한의 '7·1 조치'를 부분개혁의 연장 및 확대로 해석하고 있다.<sup>18)</sup>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기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두 가지 유형(단계)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고전적 계획경제체제의 개혁을 계획개선형 개혁과 시장사회주의 개혁으로 구분한다.<sup>19)</sup> 대체로 계획개선형 개혁은 계획체제의 부분적 효율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의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고, 합리적 변화를 시도하며 개혁 목표에서 노동자, 기업, 국가 간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며 의사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시장사회주의 개혁은 전통적 계획경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계획기능을 장기성장 방향과 투자정책에 한정하며, 미시경제적 결정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분 기준은 대체로 시장도입을 통

16)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 개혁 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19~21쪽.

17) 정형곤,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현대북한연구』, 제5권 2호(2002), 51~111쪽.

18) 박형중, “<노임 및 물가 인상> 및 <경제관리의 개선강화> 조치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14권 2호(2002) 참조.

19) 계획경제의 개선 및 보안을 위한 개혁을 개량 사회주의, 부분개혁, 계획개선형 개혁 등의 용어로 규정하고, 시장도입 개혁을 시장사회주의 개혁,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경쟁 사회주의 등의 용어로도 규정하고 있다. 각 용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개념이 지칭하는 개혁 내용과 성격은 유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편의상 계획개선 개혁과 시장사회주의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 계획과 시장의 조화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개혁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개혁을 시장개혁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미 있는 개혁으로 시장사회주의 개혁을 강조하고, 계획개선 개혁의 목적이 계획경제의 개선 및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개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화, 즉 사적 소유권의 도입 및 확립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사실 1960~197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개혁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경제 틀 내에서의 개혁은 연성예산제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코르나이도 소유제 개혁과 가격 자유화를 통해 단기간 내에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개혁을 주장했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의 분권화 및 시장화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소련이나 동유럽,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개혁의 결과는 사례별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획개선형 개혁의 파급효과다. 계획개선형 개혁은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구조를 유지한 채, 의사결정구조 영역의 분권화를 통해 계획경제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당·국가는 위계적 관료제를 이용한 독점적 자원 배분권을 통해 생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도입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은 시장화를 의미한다. 즉 생산재, 소비재, 자본·금융, 노동에 대한 공급이 계획이 아닌 시장적 거래, 특히 교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수직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적 조정에서 수평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적 조정으로

의 전환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계획개선 개혁 조치는 연관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시장개혁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계획개선형 개혁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함으로써 계획경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더 확대된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계획경제에서의 계획개선 개혁 추진은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혁신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연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로 인한 개혁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숙 및 갈등의 확대 등의 결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의 제한성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이로 인한 정책의 혼란이나 갈등 등을 비롯한 정책의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하는 문제와 과제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 3.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내용

#### 1)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 '85년 체제'로 규정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작업은 현재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성격규정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체제 단계(혹은 유형)를 기준으로 현재 북한 경제체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기반을 두어 경제개혁 정책 및 조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야 한다. 물론 북한개혁의 전개과정이 이러한 경로를 똑같이 밟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변화를 논의할 때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일정한 경향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북한은 아직까지도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르나이가 규정한 개혁사회주의의 몇 단계에 해당되는가? 사방스의 규정대로 했을 때 시스템 개선 혹은 급진적 개혁체제인가? 다시 말해 북한은 계획개선형 개혁체제 혹은 시장사회주의 체제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 박형중이 제기하고 있는 ‘85년 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1980년대 정책 변화를 계획개선 개혁정책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의 경제는 1985년을 전후해서 계획개선형 개혁체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본다면 ‘7·1 조치’를 계획개선형 개혁의 확대·강화 혹은 시장사회주의로의 진입 조치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박형중은 북한의 1980년대 경제개선 조치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점진적 형태로 계획개선 개혁을 모색하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부분개혁체제로서의 ‘85년 체제’를 주장한다.<sup>20)</sup> 김연철도 북한이 1980년대 후반 부문개혁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21)</sup> 이정철의 경우에는 ‘일반균형 가격동학 정책’의 실행을 기준으로 합영법의 채택, 인민소비품에 대한 강조, 연합기업소 체제의 전면 도입 등 경제체제 운영상의 형식적 변화를 시도한 1984~1986년 시점을 일반균형 가격

20)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 16~20쪽.

2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369~370쪽.

동학 정책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sup>22)</sup>

1970~1980년대 북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내재적 모순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해 왔다. 즉, 북한 경제 체제 원형 내에서 당시 상황의 조건에 따른 점진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의 대외무역 발전에 대한 김일성의 강조, 그리고 ‘합영법’의 제정, 독립채산제의 강화,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1985년 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리체계의 분권화 등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치들이다.<sup>23)</sup> 이러한 조치들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조치들이 앞서 살펴봤던 계획개선형 개혁 조치들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 경제체제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즉, 고전적 계획경제체제에서 계획개선형 개혁체제로 변화했는가? 일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의 제한적 성격과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를 강조한다. 그 한계는 이러한 조치들이 계획체제의 축소 혹은 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초기 사회주의 개혁 조치들의 목적은 바로 계획경제 및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

---

22)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1), 133쪽.

23) 이희상은 1980년대의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합영법 등의 채택은 개혁적이지만, 북한 체제에 동화적(assimilable)이며 개혁적 특징을 일반대중에게 감추었기 때문에 ‘숨겨진 개혁(hidden reform)’적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 *Korean Observer*, Vol.21, No.4, p.52.



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1980년대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조치들도 계획개선형 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계획개선형 개혁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경제체제 운영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생산의 효율성과 중앙집중적 통제 사이의 갈등 속에서 계획경제로의 재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 자체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체제 자체의 변형을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주목하여 차문석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면서, 고난의 행군은 북한사회를 과도기 축적체제로 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과도기 축적체제는 새로운 축적체제의 모색기이자 위기 상황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려는 정상화 추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도기 축적체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시정적 조정 양식을 수반하게 된다. 결국 북한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과도기 축적체제가 전개되면서 ‘시장적 조정의 전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24)</sup> 이렇게 본다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경제는 계획개선형 개혁체제를 더욱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이는 바로 국가주도의 변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일부 주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북한 당국의 정책

24)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2005). 김연철은 ‘7·1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조정체제 수준이 ‘규제된 시장조정체제’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20~21쪽.

에 주목하여 경제정책 변화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으로, 그 목적은 경제위기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유지·보호하려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기존 경제시스템의 복원이 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들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sup>25)</sup> 과연 그럴 것인가?

북한은 1990년대에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했다. 이러한 위기국면은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붕괴 및 흡수통일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북한에서는 체제전환이나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위기는 계획경제의 마비를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였다. 이 시기 동안 북한은 관료적 조정기제가 지배적인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배급제의 작동 불능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spontaneous marketization)’가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로 ‘농민시장’이 합법적인 비계획부문으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제한적 활용’이라는 국가의 의도와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농민시장의 내부와 외부에 암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생적 시장화를 추동한 행위자는 배급제의 붕괴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주민들이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아

---

25) 이러한 주장은 ‘7·1 조치’의 해석에서 이 조치를 계획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연결된다.

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국가권력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관료적 조정기제와 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시장적 조정기제가 공존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구조는 합법적인 계획경제 부문과 불(비)법적인 이차경제라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차경제를 통제하면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로 복귀하려는 국가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생적 시장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정하고 제도화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경제체제의 변화를 논의할 때,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소유,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코르나이의 개혁사회주의 개념에 따르면 관료적 조정기제에서 시장적 조정기제로의 변화 조짐이 있어야 한다. 조정양식의 변화는 다시 말해 의사결정구조와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연적 축적체제의 변화가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축적체제와 조정양식의 변화 조짐이 포착되어야 한다.

북한의 1980년대 이후의 정책변화는 계획개선형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990년대 들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계획개선형 개혁체제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공식적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자생적으로 비공식적인 이차경제가 확대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 2) '7·1 조치'의 평가: 시장개혁은 시작됐는가?

그렇다면 2002년 북한 당국에 의해 취해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sup>26)</sup>를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은 바로 '7·1 조치'를 시장개혁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번 조치를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는 입장과 시장개혁을 향한 조치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평가하는 입장<sup>27)</sup>은 가격현실화를 통한 시장가격의 간접 인정, 계획 및 가격제정 그리고 자원배분의 분권화, 생산재 유통시장의 허용, 종합시장의 허용,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서의 변화 등에 주목한다. 물론 이들은 현재의 변화를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보지 않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 혹은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경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로 보는 입장<sup>28)</sup>은 북한 당국의 계획 정상화에 대한 의지, 소유권 및 가격정책의 제한성 등에 주목한다. 이밖에 앞서

- 
- 26) '7·1 조치'는 물가 및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2001. 10. 3)의 지시대로 계획지표의 축소, 지방 및 기업의 계획수립 및 가격결정 권한 확대, 생산재시장 허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27)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 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2003); 남성욱,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KDI 북한 경제리뷰』, 2004년 6월호; 이영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서울: 한국은행, 2005) 등 참조.
- 28) 조동호, "변화하는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수은북한 경제』, 2004년 여름호; 신지호, "북한 체제 변화 3단계론: 대북정책에의 시사,"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2002); 하상식, "북한 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격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2004) 등 참조.

사회주의 경제개혁 및 단계(혹은 유형)론에 입각해 북한의 이번 조치를 계획개선 정책의 연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29)</sup>

각각의 주장들은 북한의 ‘7·1 조치’의 개혁적 성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 개혁에 대한 해석에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의 정상화 시도라는 입장이 북한 당국의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면, 시장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이 조치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1 조치’는 북한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1945년 토지개혁에 비견할 만한 ‘혁명적’ 조치였다. 이후 북한당국은 공공연히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7·1 조치’ 이후의 북한 경제가 이전의 북한 경제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하고 있다.<sup>30)</sup>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북한당국의 정책을 보면,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시장을 이용한 기존 계획경제 복구 노력도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개혁이라고 부르는 북한 경제의 변화는 북한당국이 추진해 온 서로 이질적인 정책들의 복합적 산물이다. 즉 기존 경제시스템 운영방법의 확대 또는 개선, 그리고 시장제도의 도입 등이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는 입장 역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북한 불변화 가설과 계획경제 정상화 가설, 그리고 시장화 가설이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성장세를 추정한 결과 내용을 볼 때, 북한 경제 불변화 가설은 지지하기가 힘들다.<sup>31)</sup>

---

29) 이정철, “계획계량형 사회주의와 북한의 90년대 경제정책 변화,”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박형중, “<노임 및 물가 인상> 및 <경제관리의 개선강화> 조치에 대한 평가,” 등 참조.

30)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그렇다면 계획정상화 가설과 시장화 가설로 나누어지는데, 계획정상화 가설의 경우 경제정책에서 북한 당국의 의도를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북한 경제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현재 북한 당국이 통제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다. 따라서 ‘7·1 조치’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공식 인정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다시 말해 ‘7·1 조치’를 계기로 이전의 합법적 계획경제 + 불법적인 이차경제라는 이중구조가 합법적 계획경제 + 합법적 이차경제라는 이중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의도와 집행의 불일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적 경제구조 및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북한 당국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가? 7·1 조치 이후의 북한 경제 변화를 볼 때, 자생적 시장화의 부분적 제도화를 통한 계획정상화 의도가 관철되기보다는 시장화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자생적 시장화로 표현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북한 당국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7·1 조치로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거래에 대한 국가개입의 채널을 확보하고,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물자인 곡물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재확립하려는 국가 의도가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7·1 조치 이후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금지하려는 국가의 시도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실패함으로써 2003년에는 농민시장 자체를 종합시장으로 제도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한 당국이 개혁보다는 계획정상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

31)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137쪽.

서는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또한 ‘시장’이라는 개념도 자본주의의 다양한 특수만큼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실사회주의에서 시장개혁의 형태도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하듯 가격자유화와 소유권 변화 등 근본개혁만이 시장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담론의 과도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시장 개념은 사회주의 이론 내에서도 가능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체제이기에 시장, 가격, 원가, 이윤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실에서도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시장은 존재해 왔다. 국가의 통제 여부에 따라 시장의 확대, 축소 혹은 불법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합법적 형태로든 불(비)법적 형태로든 시장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개혁 초기의 변화를 사회주의 이론틀로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언제나 현실적 변화보다 늦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1978년 중국의 11기 3중전회가 열리고 등소평의 개혁실험이 출발했던 당시의 이데올로기는 실사구시였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0년이 지난 1987년이였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 담론이나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 변화의 내용과 기능이다.<sup>32)</sup>

---

32)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18~19쪽. 북한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단계를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설정하고, 이 단계에서는 계획화 공간과 함께 가치 공간, 즉 시장적 조절 기능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도적 단계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과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단계로, 계획화 공간과 가치공간,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중앙집권적 재정공간과 독립채산제의

그리고 차문석이 브로델(F. Braudel)의 “인류가 살아온 공동체에서 시장의 발전에 관한 단순하고 단선적인 역사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지적했듯이, 고난의 행군 이후 기능해 왔던 시장이 북한 사회주의 역사에서는 초기 형태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시장이 매우 조악하다는 이유로, 혹은 여전히 북한의 국가가 ‘사회주의적 원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시장이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다고 보거나 계획경제가 정상화되면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비역사적인 해석이다.<sup>33)</sup>

우리가 ‘7·1 조치’를 시장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7·1 조치의 성과, 그리고 시장개혁을 통한 체제전환 문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7·1 조치의 성과와 관련해 현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시장경제적 요소를 국가의 통제 안에 끌어들이는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니면 국가통제를 벗어나 경제개혁으로 나아갈지 미지수이나, 7·1 조치의 성과와 관계없이 7·1 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체제전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격적인 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의 상관성 문제와 연결된다.

---

관계 등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류운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범주, 공간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호(2005), 18~20쪽.

33)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75쪽.



## 4. 북한의 경제개혁 방식

### 1) 북한의 선택: 급진적 혹은 점진적 방식

북한의 경제개혁 연구와 관련해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경제개혁 전략 및 방식이다. 북한 당국이 사회경제적 현실 변화를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관련해 그 추진속도와 범위에 따라 급진적 방식(소련 및 동유럽형)과 점진적 방식(중국 및 베트남형)으로 나눈다. 급진적 방식은 개혁정책의 선택에 있어 속도 면에서는 빠르고 범위 면에서는 전면적인 진행을 강조한다. 반면 점진주의자들은 속도 면에서는 온건하고 범위 면에서는 부분적인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

급진주의와 점진주의의 속도와 순서의 차이에 대해 라빈은 이는 학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관점의 차이로 보고 있다.<sup>34)</sup> 체제전환기의 정치세력은 체제전환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혼란이라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항상 정권교체를 당할 수 있는 위기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많은 보상비용의 지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체제전환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에 의해 집권한 개혁세력은 단시일에 경제적 혼란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고, 이를 성공해야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조건의 상황이 유리한 국면에서 체제전환을 맞은 보수주의적 성격의 정권은 기존 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

---

34)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pp.118~121.

려고 할 것이고, 이의 실패는 정권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체제전환 전략은 정치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선택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지역과 시대를 통해 발생하는 시장형태의 여러 가지 변화와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 과정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형태를 볼 때, 최적의 독특한 시장체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개혁의 추진자에게 당면한 선택은 자유시장체제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고안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산업과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는 일련의 경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sup>35)</sup>

그렇다면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한다면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를 전망할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히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이 동구의 빅뱅식 개혁보다 북한에서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 요인과 초기조건에 차이로 주로 설명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하는 국영부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산업구조는 이와는 상이하다. 보통 북한의 중국식 점진적 시장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업비중보다 공업비중이 높은 소련 및 동유럽식 산업구조라는 점, 그리고 농업이 집약화되어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중국과 같은 성장잠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본적인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sup>36)</sup>

35) 고현욱, “북한 경제 연구의 딜레마와 제언: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120쪽.

36) Marcus Noland,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Security in*

중국의 경우는 국영부문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국영부문을 그대로 둔 채 비국영부문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영부문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 및 동유럽의 경우, 국영부문이 전체 경제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경제개혁은 국영부문의 개혁일 수밖에 없었다. 국영부문의 개혁 작업은 결국 고용의 조정과 보조금의 삭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갈등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위기 이후 북한 산업구조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sup>37)</sup> 계획경제의 본질적 모순과 외부적 자원 제약 현상이 결합되어 나타난 북한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군수공장과 일부 수출품 생산 공장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공장가동률 하락 현상은 잠재적 실업률을 증가시킴으로써 비국영 부문의 성장잠재력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암시장의 확산으로 비공식적으로 증가한 소상품경제 형태 역시 경제적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상 농업개혁이 전반적인 공업개혁을 추동해 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공업부문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비국영부문의 성장잠재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지방공업을 담당하는 공장들이 중국의 향진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북한의 지방공장들은 계획경제의 제도적 틀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지향적 경제활동을 비교적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 제도개혁이 추진될 경우 기업운영과 관련한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Northeast Asia* (Seoul: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999), pp.13~17.

37)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 경제 변화 연구,” 참조.

그러지만 분명 중국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초기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우, 개혁초기의 거시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북한의 거시경제적 상황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제발전전략<sup>38)</sup>에 의해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고학력의 값싼 노동력 이외에는 거의 없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확대를 통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도 중국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 착수 시점인 1979년에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북한에 비해 우월한 국제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개혁에 필요한 자원을 쉽게 조달하고,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대외환경은 분명 중국과 다르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자본조달과 수출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매력도 없다. 즉 중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다는 점(인구 2,300만 명)과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도 대외정세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7·1 조치'는 북한이 과거처럼 중앙집중적 정책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통해 외부지원을

---

38)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비교우위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린이푸 외 저, 한동훈·이준엽 역,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서울: 백산서당, 2001) 참조.

얻고자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내부개혁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계획경제 자체의 폐기 여부, 국가의 재정개혁을 비롯한 조세개혁과 금융개혁, 그리고 노동시장의 창출 등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이라는 시장개혁의 요구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산업구조를 비롯한 초기조건이 중국의 경우와 상이하다고 중국식의 점진적 경제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북한의 경제개혁 방식과 관련해서 급진적 방식과 대비되는 차원에서의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체제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주변국 입장 등 외부 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 경제체제의 점진적 전환 유도 방식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국식 모델의 적용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 경험은 동일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북한에게 유용한 사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2) 개발독재 방식은 적용가능한가?

북한 당국이 중국식의 점진적 개혁 방식을 채택한다고 했을 때, 당 독재체제의 유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발독재 방식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소개된 김정일 위원장의 박정희 시대 남측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박정희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sup>39)</sup>

---

39) 199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주영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높게 평가한 바 있으며, 2002년 5월 박근혜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1970년대 남측의 경제발전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박정희식 모델이 거론되는 이유는 첫째, 한국경제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대한 주목이다. 한국경제가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주요 산업기반이 형성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게 주요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중국식 경제개발모델, 즉 점진적 체제전환방식에 대한 관심증대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귀결되면서 ‘선경제발전, 후민주화’라는 경제발전 우선주의가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이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식 경제발전의 준거모델이 한국형 경제건설론이었다는 주장<sup>40)</sup>이 제기되면서 한국식 경제발전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었다.<sup>41)</sup>

그러나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의 북한 적용은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중국식 경제개발모델이든 아니면 한국형 경제건설모델이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확대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sup>42)</sup>

박정희식 경제발전전략의 특징은 테크노크라트 주도형 경제개발체제, 국제 분업구조를 고려한 산업건설노선, 국가적 계획체제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대외지향적 거시경제 안정책의 강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북한에 적용할 때, 개발준거 모델의 존재, 개발독재에 대한 보다 적은 정치적 부담 등의 유리한 조건이

40) 오원철, “테크노크라트에게 권한 주고 수출공업 육성해야,”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41)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한국의 경험,” 『수은북한경제』, 제2권 2호(2005년 여름), 2쪽.

42) 위의 글, 3쪽.

존재하지만,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초기 조건상 적용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전략의 측면에서 박정희식 모델의 몇 가지 특징은 앞으로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에서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다. 테크노크라트 주도형 경제개발이라든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 등은 북한의 경제 변화에서 주요한 내용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추진해야 할 수출전략은 박정희 모델이 추진되었던 1960~1970년대의 조건과 분명히 다르다.

만약 북한이 박정희 모델의 부분적 특징을 수용한다고 해서 이를 박정희 모델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미 후발사회주의에서 강행한 성장의 부정적 유산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후발자본주의적 압축성장의 부정적 효과들이 재연되는 것은 장기적 통일의 과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개발독재’라는 용어도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학술적 개념으로 엄밀히 규정된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이 정치와 경제에 대한 통합된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발과 독재의 의미, 개발과 독재의 상호 연관에 대해서는 더 진전된 설명이 필요하다.<sup>43)</sup> 흔히 개발독재를 후발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정치적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개혁 국면에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을 지칭하게 된다.

외형상 유사한 형태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볼 때, 과연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서부

---

43) 개발독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병천,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이병천 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서울: 창작과비평사, 2003) 참조.

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권위주의 체제의 작동방식과 사회주의 체제의 작동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박정희 시대와 현재의 북한 체제를 비교할 때, 양 체제의 성격을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수령 중심 정치와 박정희 시대의 군사독재 정치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체제의 운영 및 작동 메커니즘에서 형태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용적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실 경제발전전략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박정희식 모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개발독재 방식은 북한 당국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적용에 있어 북한의 주객관적 조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 조건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더구나 개발독재 방식이라고 지칭되는 경제발전 전략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혁 연구에 있어 개발독재 방식에 대한 적용 가능성 논의보다는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에 따른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 경제개혁 연구에 있어 평가의 혼란은 평가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재 북한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사회주의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전통적 개혁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개혁적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과연 시장개혁인가에



대해서는 시장개혁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연구는 총론적 수준에서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획체계, 경제관리체계, 기업경영 및 독립채산제, 재정과 금융제도, 노동시장 등 각 경제 관련 부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진한 상태다. 이러한 경제 각 부문별 연구의 부족은 북한 경제개혁 가능성 연구에 있어 일정 정도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혁 가능성 연구는 경제 관련 부문의 실증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개혁 여부와 관련해서 시장화의 정도를 분석할 때,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창출 여부 및 형성 과제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 자생적 시장화의 확산으로 노동의 존재양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변화, 즉 노동의 상품화 여부는 시장개혁과 체제전환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북한 경제개혁 연구는 총론적 수준에서의 개혁여부, 개혁방식, 성공조건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시적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연구자들이 이러한 필요성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연구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공식문헌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과의 심층 면접을 잘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추론과 가설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을 통한 보완작업이 병행되어야 한

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각 사례의 개혁 성공 유무는 북한에게는 역사의 산 교훈이다. 물론 북한이 특정국가의 경험을 전면 수용하거나 단순 모방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사례의 조건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조건에 맞게 여러 정책 가운데 일부를 취사선택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경제개혁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의 북한 경제 자체가 현실 사회주의 경제의 일반적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주·객관적 조건이 북한의 독자적인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경제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경제 일반 논의와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개혁 연구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 자체가 학문적 측면에서 실증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과 가설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이념적, 정책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접수: 7월 11일 / ■ 채택: 8월 16일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의 성찰』(서울: 한울, 2005).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서울: 해남, 2002).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이병천 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서울: 창작과비평사, 2003).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서울: 통일연구원, 2005).  
이영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서울: 한국은행, 2005).  
전홍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서울: 한울, 2005).  
린이푸 외 저, 한동훈·이준엽 역,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서울: 백산서당, 2001).

#### 2) 논문

- 고현욱, “북한 경제연구의 딜레마와 제언: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의 성찰』(서울: 한울, 2005).  
김석진,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2).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 개혁 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김영호,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1995).  
남성욱,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KDI 북한 경제리뷰』, 2004년 6월호.

-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북한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 박형중, “<노임 및 물가 인상> 및 <경제관리의 개선강화> 조치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14권 2호(2002).
-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한국의 경험,” 『수은북한경제』.
- 신지호, “북한 체제 변화 3단계론: 대북정책에의 시사,”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2002).
- 오원철, “테크노크라트에게 권한 주고 수출공업 육성해야,”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 윤미량, “북한 체제의 내구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서울: 한울, 2005).
- 이병천,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이병천 편,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서울: 창작과비평사, 2003).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형태의 변화”(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정철, “계획계량형 사회주의와 북한의 90년대 경제정책 변화,”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 \_\_\_\_\_,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1).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 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2003).
- 정형곤,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 북한,” 『현대북한연구』, 제5권 2호(2002).
- 조동호, “변화하는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수은북한 경제』, 2004년 여름호.
-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2005).
- 하상식, “북한 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격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2004).

<국외문헌>

Bernard Chavance,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Boulder: Westview Press, 1994).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able Reform," *Korean Observer*, Vol.21, No.4.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2).

Marcus Noland,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eoul: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999).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5).

## Issues of Studying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Moo Chul Lee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three major controversies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first, whether or not North Korea is reforming its economic system; seco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ird, the conditions and methods that will lead to the success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The study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especially attempts at evaluation, is made difficult by the current progressive change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lack of a definite assessment standard. In a conventional reform economy based on socialistic economic operation, the “7·1 measures” certainly represent reform initiatives. However, different perspectives on market reform lead to varying analyses. Moreover, owing to the insufficiency of data that would enable

researchers to assess concrete institutional changes, the research is subject to unavoidable limitations that interfere with factors supporting evaluation of measures of innovative economic management.

On a general level, active and diverse research is being carried out on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However, specific research on different economic elements, such as the planning system, the system of economic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labor market, is insufficient. The lack of this specific research has given rise to limitations on studying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Therefore, the study of economic reform should be supported by the accumulation of specific research on elemen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ey Words: Economic Reform, Post Socialist Transition, System Adjustment, Market Socialism, Spontaneous Marketization, Radicalism, Gradualism

## 필자 약력(계재순)

### 이무철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서,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1994)하고, 같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분권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로 정치학 박사학위(2004)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경향과 정책적 대응” (2006), “북한의 중앙-지방관계: 중국과의 비교”(2005),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2005), “북한의 지역자립 구조와 행정적 분권화의 한계”(2004) 등이 있다.